신천지 조사 놓고 맞붙은 친명·친청… 민주당 갈등 표면화

최고위원회의서 당내 계파 충돌
박선원 "조직적 입당 정황 발견"
한민수 "입수 경위·근거 공개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과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하며 김민석 당 대표 취임 100일 하루 전에도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내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을 두고 "제가 거짓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흔드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야말로 일제의 부역자들을 청산하자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신천지의 민주당 조직적 입당의 성격과 행태에 대한 보고를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증언 녹음을 포함시켜서 진행했고, 공직 후보자 경선과 당직 선거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명부 입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령 위반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신천지, 반명(反이재명), 분열주의와 싸우자 한 것이 잘못인가. 저는 지난 전당대회 경선에서 모든 최고위원, 당 대표 후보가 '당연하다'라고 나올 줄 알았다"며 "그런데 (친청계의) 그 이후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히려 (신천지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제보를 소개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 최고위원께서 하셨다"며 "그렇지 않다. 원한다면 이번 주 내라도 제보자를 공개적인 자리에 세우겠다. 그것이 과연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해당 최고위원의 목표인지 잘 생각해서 입장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께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말자', '의총 공개도 하지 말자'고 갑자기 말씀하셨을 때 저보다 당 생활도 많이 했고 훨씬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다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친청계가) 최고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당원 정비 TF 단장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다 사실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최고위원은 "일제 부역자란 표현까지 나왔다"며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나. 특정 정치인과 연루된 증언이 있다고 (박 최고위원이) 하는데, 당장 증언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정말 매사가 이런 식"이라며 "지난 7월20일 난데없이 김민석 당시 당 대표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이후로 매사가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오늘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았나. 밝혀달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한 최고위원은 박 최고위원이 신천지 명부 입수 경로, 당 권리당원 명부 대조 방법, 신천지 교인 입당 시점, 이만희 교주의 직접 조직적 당원 가입 지시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TF 조사 결과 8·17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0.2%다. 이 숫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며 "그러면 여전히 박 최고위원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인가. 제발 본질 좀 흐르지 말라.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당원 명부 입수 경위는 합법적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은 전혀 없다고 (박 최고위원이) 한 만큼, 그대로 공개해도 된다"며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당원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중복수급시 유족연금 30% '적정성 도마'

국회 예정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월 평균 급여액 36만원 불과
국민연금연구원, 지급률 확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급권과 관련, 현행 유족연금 30% 추가지급 방식의 소득보장 효과, 다른 공적 연금과의 차이, 지급률 조정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중 보건복지위원회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공적 연금 급여다. 국민연금 외에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도 도입돼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할 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은 50%, 20년 이상인 사람은 6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동일한 수급권자에게 두 개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지급한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엔 본인의 노령·장애 연금 급여 지급은 정지된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 사람이 나누기 위한 장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 발생한 사람은 지난 2021년 12만3994명에서 2025년 20만8242명으로 67.9% 증가했다. 이 중 본인의 연금 수급권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받은 사람은 2025년 17만1547명으로, 전체의 82%다. 유족연금을 선택해 본인의 연금 수급권이 정지된 사람은 3만6695명으로 전체의 18%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유족 연금의 차이도 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중복 시 수급권 중복시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소득 상실에 대응해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설계됐지만, 2024년 기준 월평균 급여액이 36만원에 불과해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소득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상대빈곤율' 관련,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노령연금 수급 가구보다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유족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60.34%로 더욱 심각했다.

예정처는 "현행 유족연금 30% 추가지급 방식이 수급자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역연금과의 비교도 단순 중복지급률 차이에 그치지 않고 유족연금 산정방식과 실제 급여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복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유족연금 선택 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경우 수혜인원과 평균급여 변화,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추가 재정소요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족연금의 소득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수급 시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한편, 유족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은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입기간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p) 올려 50%로 설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서 개정안 내용대로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정하고 유족연금 산정기준을 바꿀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038억원, 연평균 80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연금포기비율〉 (단위: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복수급권 발생 인원(A)	123,994	143,995	159,527	182,653	208,242
노령·장애연금 선택(B)	104,049	120,601	132,572	151,201	171,547
비율(B/A)	84	84	83	83	82
유족연금 선택(C)	19,945	23,394	26,955	31,452	36,695
비율(C/A)	16	16	17	17	18

/보건복지부

자주파·동맹파 동시 교체… 외교안보라인 새 리더십

›› 1면 '국정원장 후보'서 계속

현 안보실 2차장인 임웅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대전 출신으로 서대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부단장, 주미국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료다.

직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홍익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67년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으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대표를 거쳐 정무수석을 맡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1974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우석고와 연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MBC 아나운서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당 경험을 쌓았다.

현 청와대 수석대변인인 강유정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서울 출신으로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어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문화예술 평론가로 강남대 교수,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을 지냈고, 22대 국회의원을 거쳐 수석대변인을 맡아 왔다.

이번 인선을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과 '동맹파'로 분류되는 조 장관 가운데 한 명만 교체할 경우 정책 노선 변화로 비춰질 수 있어, 동시에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외교안보라인을 한꺼번에 바꾼 이유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무역,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의 실효성 논란이나 대미 외교 불협화음이 교체에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간의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기조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과제도 우리 정부의 기조다.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강 후보자의 경우 정보·안보 등 국정원 업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안보 과제를 국제 공조 속에서 결단력 있게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2일)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선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최교진 전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최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에 면직안을 재가했는데, 정치권에선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보고 있다. 다만 전날 사임해 후임 인선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수능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여유를 두고 후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실장은 "후임자 인선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syj@